

“휴대폰 개통하려면 얼굴부터?”… 실효성·기본권 우려 ‘충돌’

‘안면인증 의무화’ 강행 논란

내달 23일 전면 시행 방침
청원 5만9660명 동의 마감
참여연대·민변, 개인정보위 진정
인식률·적용 범위 두고 이견

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강행 의지와 시민사회·업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감한 생체 정보를 대체 수단 없이 강제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시점 조정이나 대안 인증 수단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별도로 실제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보안을 마쳤고, 인증이 완료되면 관련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최소 수집과 최소 침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 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반대 여론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

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최종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면 정보가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준비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논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안면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률이 95% 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는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려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포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등록증은 이번 안면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는 내국인에게 집중되고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본인확인 체계와의 충돌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유통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는 구조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안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기존 스캐너 방식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수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선택 가능성이 전제된 자유로운 의사”라며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강요된 동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험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트럼프 “日, 795조 對美 투자 1차 착수… 3개 전략분야”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330억弗
텍사스 석유 수출시설에 20억弗
조지아 다이아 제조 설비 6억弗
日 다카이치 105대 총리 재선출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3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미국과 일본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 다이아몬드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관세 합의 당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9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프로젝트별 투자액은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가 330억 달러(약 48조원)로 가장 많다. 텍사스주 석유 수출 시설은 20억 달러(약 3조원)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약 6억 달러(약 1조원)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따른 첫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도쿄 남쪽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항공모함 US S 조지 워싱턴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손짓하고 있다.

/AP뉴시스

고 있다”고 적었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달러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은 해당 시설이 9.2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자 미국의 약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러트니 장관은 “이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 미국 제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건설될 330억달러의 가스화력 발전소로 미국에서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

했다.

최근 미국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발전 설비와 송배전망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본이 첫 투자 대부분을 가스 발전소에 집중한 것은 미국이 현재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건설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는 텍사스주 인근의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 사업이다.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주도권 강화와 직결된

프로젝트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에는 첨단 반도체와 방산 물자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이 구축된다.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하면서 아직 첫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한 상황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18일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이날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는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표결을 시행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투표 총수 464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압도적 과반을 확보, 다시 총리로 선임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지명을 거친 뒤 곧바로 조각에 착수한다. 왕궁에서 총리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마이크론, 경력직 겨냥 ‘2억 이상’ 유인책 전망

》1면 ‘테슬라 ‘K-인재 눈독…’서 계속

테슬라가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한국의 인재들의 해외 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이크론이 국내 반도체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높은 연봉이다.

미국 연봉·보상 정보 플랫폼 레벨스닷컴파이아이에 따르면 마이크론 엔지니어의 E3 직급과 E4 직급의 연봉은 6700만~2억1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론에서 E3 직급의 경력은 약 5년, E4 직급은 약 12년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본급을 제외한 성과급 평균이 약 1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마이크론이 경력직들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코리아까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이들의 몸값은 더 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5일 AI 칩 설계 엔지니어 채용공고를 냈다. 테슬라코리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며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에게는 자신이 해결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3가지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양성운 기자 ysw@